

【자료】

## ‘역사를 잊으라’는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누구의 정부인가?

2023년 3월 6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문>의 요지는 한일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이제 ‘역사를 잊으라’는 것이다.

위 발표문을 통해 본 윤석열 정부의 역사 인식 수준은 전 국민을 경악하게 했다. 그간 개최된 민관협의회와 공개토론회 등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내보이기 위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도 명확해졌다. “‘고령의’ 피해자 및 유족 분들의 아픔과 상처가 ‘조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하겠다는 표현은 이제 더이상 피해자들과 국민의 정서를 돌보지 않겠다는 정부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었고, 그로부터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라는 폭력적인 방안을 도출해냈다. 이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그토록 목놓아 외쳐 온 일본 정부 및 일본 전범기업의 사죄와 배상을 윤석열 정부의 시혜로서 대신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을 향한 권력의 오만한 훈계와 다름없다.

대한민국 국민의 역사는 잔혹한 전쟁에 필요한 군수물자를 생산하기 위해 강제동원되어 구타와 굶주림, 삼엄한 감시 속에서 위협하고 고된 노역에 종사해야 했던 피해자들의 기억과 목소리이다.

대한민국 사법(司法)의 역사는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저지른 일본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하여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들이다.

대한민국 정부의 역사는 “양국이 과거를 직시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에 기초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일본

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하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하게 했던 1998년의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이다.

감히 전 국민을 향해 이 모든 역사를 잊어야 미래가 있다고 훈계하는 정부에 묻는다.

이것이 “피해자측의 의견을 존중”한 결과인가?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민관협의회에서 피해자들이 줄곧 외쳐온 것은 오로지 책임 있는 자들의 진심어린 사죄와 배상이다.

이것이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고 “치유”하는 방식인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이 곧 대한민국의 역사이며, 그 아픈 역사를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곧 치유의 길이다.

이것이 1998년 공동선언의 “발전적 계승”인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반성이 전제되지 않는 한 발전적 계승은 있을 수 없다.

이것이 “양국의 공동이익과 지역 및 세계의 평화번영”을 위한 노력인가? 자국민을 보호하지 않음으로써 국가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고 믿는 정권, 피해자의 입을 막아 평화번영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정권은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누구의 정부인가?

이에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왜곡된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한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결 방안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제라도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함께 분노하는 국민의 외침에 따라 정부의 강제동원 해결방안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3월 7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원 일동